

정보통신기술혁명과 민주주의의 미래*

김선혁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본 논문은 인터넷의 등장과 발전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혁명이 현존 정치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시론적(試論的)으로 고찰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정치제도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은 다양하나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기술혁신이며 기술혁신은 일정한 매개변수들을 거쳐 정치제도의 변화를 초래한다. 우선 과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달이라는 기술혁신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전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이어 현재의 대의민주주의가 투입에서의 대표성 부족, 산출에서의 효과성 부족, 그리고 투입에서 산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부패의 발생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가 다양한 시대적 상황과 비민주주의적 대안의 거센 도전 등에 의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혁명이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불러일으키고 있는 변화와 이에 따른 시민의 정치적 역량과 의식의 변화, 그리고 선거 등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들의 변화를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정치제도는 참여와 협의를 강조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논의를 맺는다.

주제어: 민주주의, 정보통신기술, 기술혁신, 정치변화, 구텐베르크 인쇄술

* 본 연구는 동아시아연구원의 지원(한샘 DBEW재단의 재원)과 고려대학교 연구비(K1508471)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I. 서론: 기술혁신과 정치변화

이 글은 인터넷의 등장과 발전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혁명(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Revolution: ICTR)이 현존 정치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시론적(試論的)으로 고찰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정치제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으나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기술혁신이다. 기술혁신은 일정한 매개변수들을 거쳐 정치제도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 글에서는 주로 최근의 가장 두드러진 기술혁신인 정보통신 기술혁명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지만, 사실 기술이 정치에 심대한 인과적 영향력을 미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글에서 필자가 개진하고자 하는 주장의 핵심은 과거 전근대 시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일정한 매개적 인과연쇄(causal chain)를 통해 봉건적 정치제도의 퇴장과 근대적 민주주의의 등장으로 이어진 것과 유사하게 현재 정보통신기술혁명 역시 일정한 매개적 인과연쇄를 통해 현존 정치제도의 위기와 새로운 정치제도의 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정치제도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그리고 그 요인은 그것이 정치제도의 변화와 시점(時點) 면에서 얼마나 가까이 위치하는가에 따라 근인(近因)과 원인(遠因)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근인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좁게는 정치인들 간의 합의, 그리고 넓게는 국민의 광범위한 요구 등 다양한 수의적(隨意的, voluntaristic), 행위적(behavioral)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즉, 정치제도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原因)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정치행위자들의 구체적인 의사와 행위인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합의, 요구의 이전 단계로 인과연쇄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훨씬 더 심층적인 원인(遠因)이 위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정치행위자들의 협상과 합의 뒤에는 보통 기존 정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골고루 반영해 주지 못하는 데 대한 행위자들의 심각한 실망과 불만이 존재한다. 특히 정치적 세력관계 상에서 우위 혹은 다수를 점하게 된 계급이나 계층이 이

같은 실망과 불만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정치제도는 변화에의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정치제도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실망감을 주게 되면 마침내 정치제도의 변화가 강제된다.

이 글은 궁극적으로 정치제도의 변화에까지 도달하는 일련의 인과연쇄의 출발점으로서 기술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에 초점을 맞춘다. 부연하면, 기술혁신이라는 초기 조건(initial condition)이 어떻게 사회의 변화로 연결되고, 그것이 어떻게 다시 다수 사회구성원의 의식과 역량의 변화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정치제도 변화의 요구 및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자 한다.

기술혁신이 정치제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현존 논쟁은 최근의 정보통신기술혁명이 대의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라인골드(Rheingold, 1995), 그로스만(Grossman, 1995), 바버(Barber, 1998), 네그로폰테(Negroponte, 1995) 등은 정보통신기술혁명이 목하 서구 대의민주주의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의 IT/디지털 민주주의의 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 데이비스와 오웬(Davis and Owen, 1998), 노리스(Norris, 2001) 등은 정보통신기술혁명이 기존 사회의 권력구조를 유지 혹은 강화할 뿐, 정치와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문헌은 몇 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째, 기존의 문헌은 현재 진행 중인 기술혁신, 즉 최근의 정보통신기술 발전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어 비교역사적인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 문제의식을 현재의 정보통신기술혁명과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로 좁게 가져가기보다는 과거에도 기술혁신이 정치체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사례가 있었는지를 탐색하여 기술혁신과 정치체제 간의 인과적 상호관계를 좀 더 일반론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문헌은 대체로 기술혁신이 민주주의, 특히 서구 대의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만을 조명하고 비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하여 기술의 혁신은 민주주의뿐 아니라 비민주주의 정치체

체에 대해서도 상당한 도전과 기회를 제기하고 있다. 기술혁신이 다종(多種)의 정치체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규명해야 보다 일반론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기존의 문헌은 낙관론 대 비관론, 긍정적인 영향 대 부정적인 영향의 형태로 대체로 이분법적인 성격을 띠는 논의였다. 하지만 이보다 더 긴요한 것은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를 균형적으로 결합하고,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고루 고려한 기초 위에 미래에 도래할지 모를 (혹은 도래해야 바람직한) 정치체제의 모습을 시론적이고 잠정적인 형태로라도 제시해 보려는 노력이다. 이 글은 기존의 정보통신기술-대의민주주의 논쟁이 가지는 이 같은 몇 가지 한계에 주목하여 기존의 논의를 역사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으로 시공간적으로 확대시킬 것이다. 즉, 과거의 기술혁신-정치체제의 인과적 관련성에도 주목하고, 기술혁신이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민주주의 체제에까지 확장시킬 것이다. 아울러 기술혁신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들을 양시론(兩是論) 혹은 양비론적(兩非論的)으로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존의 민주 혹은 비민주 정치체제들이 정보통신기술혁명으로 인해 맞닥뜨린 기회와 도전들을 조명하여 장차 도래할, 혹은 성취해야 할 정치체제의 구체적인 속성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추정적인 차원에서나마 논의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II절에서는 전근대 시기 가장 중요한 기술혁신인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어떻게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의 등장과 발전,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로의 진화로 이어졌는지 살펴본다. 이후 III절에서는 현존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당면해 있는 몇 가지 고유한 위기와 그러한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배경적·상황적 변수들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완화시키려는 그간의 간헐적인 시도가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보인다. IV절에서는 민주주의가 맞닥뜨린 도전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기술혁신인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어떻게 증폭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뿐 아니라 비민주주의 정치제도 또한 정보통신기술혁명이 제기하는 중대한 도전들로부터 별로 자유롭지 않음을 보인다. 결론 절인 V절에서는 정보통신기술혁명으로 인해 초래될 정치제도 변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구상해 본다.

II. 민주주의의 등장과 발전

특정한 기술과 특정한 정치제도가 정확히 일대일로 대응한다는 주장은 기술결정주의(technological determinism)에 가깝다. 하지만 근대적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술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15세기에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금속활판인쇄술(mechanical movable type printing)은 무엇보다도 지식과 정보가 유통되는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이전까지 귀족 등 일부 식자(識者)들의 전유물이었던 지식과 정보가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손쉽게 대량 전파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힘입어 당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원리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확산되었다. 1517년 종교개혁의 개시를 알린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Disputatio pro declaratione virtutis indulgentiarum)’은 구텐베르크 인쇄술 덕분에 불과 2주 만에 전 유럽으로 파급되었다. 이에 루터는 인쇄술을 가리켜 “복음 전파를 위해 신이 내리신 최대의 선물(God’s greatest gift)”이라고까지 극찬하였다(Linder, 2008: 24).

르네상스 시기 유럽에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획기적인 대량 정보 전달(mass communication)을 가능케 했고, 이는 사회구조의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변화로 이어졌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혁명적 사상과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국경이라는 지리적 제약을 넘어 제한 없이 유통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과 아이디어, 정보와 지식을 접한 대중의 지식과 의식이 성장하였다. 교육과 학습이 더 이상 소수의 엘리트나 식자들에 의해 독점되지 않았고, 지식과 의식이 자라난 ‘각성된 대중(awakened mass)’은 기존의 정치적, 종교적 권위에 비판과 도전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산업혁명으로 근대 산업사회가 발전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정보와 지식의 활발한 유통으로 각성된 대중이 중산층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써 민주주의를 지지하게 되었다. 각성된

중산층 대중은 기존의 종교적, 정치적 권력층과의 유혈·무혈 대립과 갈등을 통해 근대 정치제도인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확립하기에 이른다. 이후 민주주의의 발전과 전파는 우리가 익히 친숙하게 알고 있는 19~20세기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이므로 상술(詳述)이 불필요하다.

민주주의의 등장과 발전에 대한 정치학 분야의 통상적인 서술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된 부분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의 등장과 발전의 배경에 기술적 기반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를 선호했고, 그것을 지배적인 정치제도로 구현하기를 원했던 새로운 정치사회 계층이 등장하여 점차 세력화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인과연쇄의 이전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한 세력의 등장에 원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이라는 기술혁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르네상스 시기 구텐베르크 활자술의 발명이 민주주의의 등장과 확산에까지 연결되는 다단계 인과연쇄를 살펴보면, 우리는 정치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기술적 변수와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첫째는 정치제도의 변화라는 최종 결과를 초래하는 변수는 직접적으로는 주요 정치행위자의 행위와 상호작용이라는 근인이지만 보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을 초래한 기술적 기반, 기술혁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여기서 정치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혁신은 단순히 임의의 기술혁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의 유통과 전달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는 기술의 혁신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표상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귀결로 등장한 정치제도인 동시에 그 시대에 가장 잘 조응(照應)하는 정치제도이기도 했다. 이렇게 등장한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마침내 근현대 가장 지배적인 정치제도로 부상했다. 그리고 근대 최고의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의 가장 순수한(pristine) 아이콘은 미국 민주주의였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정치제도가 가지는 장점을 가장 분명하게 구현하고 구세계(舊世界, the old world)와도 확연히 구분되는 정치질서를 표상하는 사례였다.

한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법론적 근간은 대의제였다. 고대 그리스에서 구사했던 것과 같은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커져버린 현

대 국가 규모에서 간접민주주의, 즉 선량(選良)의 선출을 통해 입법부를 구성하고 그렇게 선출된 입법부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였다. 결국 현대 민주주의에서 국민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는 ‘선거’로 압축되었다. 오늘날 선거의 존부(存否)는 한 국가가 민주주의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고, 선거를 통한 대의를 핵심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는 근현대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호환적인(interchangeable) 동의어가 되었다. 요컨대 현존 민주주의의 가장 지배적인 형태는 대의민주주의이다.

미국을 모범으로 하고, 선거를 중핵으로 삼는 대의민주주의는 특히 1970년대 이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제3의 범지구적 민주화(the third wave of global democratization)”로 이어졌다(Huntington, 1991). 자유로운 선거와 공민적(公民的) 자유(civil liberties)를 핵심 요소로 하는 민주주의는 현재 세계 정치제도의 가장 지배적인 형태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미 명실공히 민주주의이거나, 민주주의를 자칭하거나, 혹은 민주주의로의 전환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대부분 국가의 정치제도와 관련하여 민주주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인식될 정도로 지배적인 정치형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주의 앞에 붙는 수식어(“democracy with adjectives”)가 중요한 연구의제가 되고(Collier and Levitsky, 1997), “어떤 종류의 민주주의인가(what kinds of democracy?)”가 중요한 질문이 되었으며, “민주주의의 질(quality of democracy)”이 중요한 측정 대상이 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구텐베르크의 활자술 발명은 정보와 지식의 대량 유통과 전파를 용이하게 하여 일반 대중의 의식을 성장시켰고, 의식이 성장된 일반 대중은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정책을 입안·운용하지 않는 기존의 봉건적 정치제도 대신 새로운 정치제도를 원했고 결국 그러한 정치제도의 구현을 관철시켰다. 그렇게 탄생한 민주주의는 현실적 운용에서 선거를 근간으로 하는 ‘대의제’라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고 그 결과 민주주의의 지배적인 형태로 자리잡은 대의민주주의는 르네상스 시대 구텐베르크 기술혁명의 종착점이 되었던 것이다.

III. 현존 민주주의의 위기

르네상스 시대에 조응하여 현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배적인 정치제도로 자리잡은 민주주의가 최근 들어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위기는 두 가지 차원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대표성의 위기’, 즉 ‘투입(input)의 위기’이다. 애초 민주주의는 그것이 대체한 봉건적 정치제도에 비해 보다 많은 인민들을 더 효과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 고안되었다. 하지만 현존 민주주의 정치제도들의 현실을 보면 그 ‘투입의 과정’이 충분히 대표적이지(representative) 못하다. 정치공동체의 전 구성원이 전원 다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선량을 뽑고 있지만 이들은 여러 이유로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대표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우선 많은 기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투표율은 상당히 낮고, 점점 하락하는 추세이다.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특정 후보가 절대다수를 득표한다고 해도 당선자의 대표성이 크지 못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당선된 후보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잘 해야 과반, 그리고 후보가 난립한 경우에는 과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득표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문제이다. 즉,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대의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순다수(simple plurality) 득표제 하에서는 많은 경우 낮은 비율의 득표를 한 후보들이 양산된다. 불과 20~30% 정도의 득표율로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당선되는 선량들이 과연 정당성(legitimacy)과 대표성을 가지고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과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게다가 선거에 출마하는 인사들의 풀(pool) 자체도 협소하다. 국민의 다양한 배경과 정체성(계층, 계급, 정치적 성향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소수 돈(선거자금) 있는 자들이 출마하고, 기존 권력자들과의 인맥이 닿아있는 자들이 공천 받고, 지역적 연고 등 전근대적인 인연이 존재해야 당선되는 등 선

거에 출마하는 인사들의 풀 자체가 좁다. 특히 정치자금의 문제는 기존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괴롭히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2012년 11월 6일 미국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 투입된 자금이 최대 60억 달러(6조1천억 원)를 돌파했다는 추계가 있다(미국 Center for Responsible Politics) (고나무, 2012). 당시 롬니 후보는 대선 기간 중 월스트리트로부터 총 2000만 달러(약 2,100억 원)의 선거 자금을 받았고, 오바마 대통령은 600만 달러를 받았다(백종민·조목인, 2012).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이후 모은 정치자금은 4억 달러(4천300억 원)에 이른다. 미국 민주주의에서 주요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액수의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서는 출마를 꿈도 꿀 수 없다. 선거가 ‘금권선거’가 되어 버리고, 민주주의가 ‘금권정체(plutocracy)’로 전락하였다는 것이 더 이상 근거 없는 비판이 아닌 것이다.

민주주의가 맞닥뜨린 두 번째 차원의 위기는 ‘효과성의 위기’, 즉 ‘산출(output)의 위기’이다. 국민들은 자신이 뽑아 놓은 선량들이 충분히 대표적이지 못하여 느끼는 소외감과 실망감에 더하여 그렇게 대표성이 결여된 선량들이 만들어 내는 법, 정책 등 정치제도가 산출하는 산출물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정치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느낀다. 현재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여러 공공문제의 해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정지도자의 리더십과 결단력, 관료의 청렴성과 전문성, 정치인들의 협상력과 정책지식, 정부 각 부처 간 조정과 협업, 여타 제도적 환경의 성숙 등에서 심각한 부족과 결핍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중요한 정책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거나 잘못 해결되고 있다. 국방·안보·국민안전, 외교·통상, 경제·산업·노동, 복지·교육, 환경 등 제반 정책 분야에서 개별 국가가 적절한 정책적 산출을 내지 못해 효능성(efficacy)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국제정치 차원에서 보더라도 역량 있는 정부들 간의 국제 공조와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힘을 상대화 시키는 다양한 주체들의 등장으로 인해 그 권위와 권력에 도전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안보, 경제, 기후, 환경, 자원 등의 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뚜렷한 실마리를 찾아내지 못하

고 있는 형편이다.

정치체제가 ‘산출’해야 하는 것은 정치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들을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일이므로 민주주의의 위기의 본질은 1차적으로 정책의 질, 정책 공조의 질이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의 질 혹은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서의 협력 여부와는 별도로 현존 민주주의 정치체도의 중요한 한계 중 하나는 그것이 ‘행복한 공동체’를 산출해 내는 데에도 실패했다는 것이다. 행복한 공동체를 산출해내는 것은 공동체가 수시로 당면하는 긴급한 혹은 긴급하지 않은 정책 사안들에 대해 어떻게 적절히 대처하는가 하는 단편적인 수준의 과제가 아니다. 그것은 좀 더 심층적이고 구조적인 과제이다. 바람직한 정치체도가 마땅히 지향할 바가 행복한 공동체의 지속, 나아가 영속이라면 구성원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공동체를 잘 보존하여 발전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 현존 민주주의 정치체도가 이런 관점에서 특별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가장 단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신뢰, 네트워크, 규범(호혜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생성과 유지에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기 힘들다. 같은 민주주의 정치제도들끼리도 사회자본의 수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사회자본 간의 추정적 관계가 틀렸을(spurious)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회자본뿐 아니라 과거 대면접촉을 특징으로 가졌던 전통적인 공동체에서 적절히 작동했던 도덕적·윤리적 규범 기제들이 익명적(anonymous) 현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와해되었고 이는 민주주의가 복원할 수 없는 숙제가 되었다. 과거에 민주주의와 밀접하게 관련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던 시민문화(civic culture) 또한 더 이상 민주주의의 특성으로 치부하기 힘들어졌다. 최근, 특히 제3의 범지구적 민주화 시기에 들어서면서 민주주의는 선거, 제 공민권 등을 최소한의 제도적 요소들(institutional minima)로 가지는 일정한 제도의 꾸러미(bundle)로 인식되어 왔고, 유감스럽게도 문화적 특성, 규범적 특성, 도덕·윤리적 특성은 그러한 꾸러미에서 사실상 제외되었다. 제도에 대한 과도한 강조, 그리고 문화에 대한 외면은 아마도 제도가 가지는 이전가능성(transferability) — 즉 바람직한 제도는 ‘모텔’로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전수가 가능하다는 점 — 때

문이 아닌가 싶다. 그에 비해 문화는 이전의 가능성이 낮고 또 그 변화에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요컨대, 현대 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는 다양한 정책 현안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행복한 공동체를 생성, 발전시키는 데에도 그리 큰 공헌을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존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투입에서의 대표성 부족, 산출에서의 효과성 부족이라는 양 차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反)정치론, 혐(嫌)정치론은 더 이상 병리적인(pathological) 비주류 현상이 아니고 지배적인 주류 현상이 되어 버렸다. 정치는 비판과 비평의 대상일 뿐 아니라 혐오와 조소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더구나 위에서 언급한 투입과 산출 면에서의 위기가 정치제도 본체—즉,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제도의 본질적 구조—자체의 심각한 하자과 결할 경우 정치제도는 급격히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여기서 정치과정 자체의 심각한 하자란 가장 대표적으로는 바로 부패 문제이다. 대부분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부패는 상당히 큰 문제이다.

EU집행위원회는 2014년 2월 3일에 28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된 〈EU 반부패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 선진국들이라고 여기는 국가들도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EU 반부패 보고서〉는 독일에 대해 공직 수행 후에 민간 기업에 일자리를 잡는 소위 ‘회전문 인사’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언급하였고, 프랑스는 공공서비스 조달 부문과 국제거래 분야의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또한 영국은 정당 기부금과 선거 비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EU의 선도국들조차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만연한—혹은 만연한 것으로 보도·인식되는—부패는 국민의 대정부 신뢰를 저하시키고 대정치 불신을 높여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위기를 심화시킨다(이창구, 2014).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주의 자체의 과정적인(processural) 문제들—즉 투입에서의 비대표성, 산출에서의 비효과성, 과정에서의 부패 문제—뿐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맥락적·시대적 변수에 의해서도 증폭·가속화되고 있

다. 맥락적·시대적 환경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취약성과 낮은 성과(low performance)를 더 부각시키는 동시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노력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조명해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환경적 요인은 세계화, 탈냉전, 탈발전·탈근대라는 시대적 환경이다. 세계화가 주권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제대로 논하려면 별도의 글이 필요하겠지만, 세계화가 가져온 정치사회적 주체의 다수화(pluralization), 인적·물적·사상적 교류의 활성화 등은 대체로 국가의 전통적 역할을 약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화가 가져온 국가 간 무한 경쟁 속에서 다양한 행정 및 정책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치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 무능이 훨씬 더 두드러지고 이는 더 심각한 정통성의 위기로 직결되기 일쑤이다. 동시에 탈냉전 또한 민주주의의 무능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 냉전 시기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가진 정당성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당시 양극체제에서 경쟁의 상대가 되었던 사회주의 1당독재 정치체제에 비해 투입 면에서 더 대표적이고, 산출 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비교의 대상이 문자 그대로(literally) 소멸되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끼리 경쟁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끼리의 경쟁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란 더 힘들어졌다. 게다가 탈발전(post-developmental), 탈근대(post-modern)라는 시대적 상황은 정치제도의 성과 지표(performance indicator)가 더 이상 국민소득이나 경제성장률과 같은 몇 가지 정량지표(quantitative measures)로 요약 불가능하고 국민의 총체적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보다 살만한(livable) 곳으로 —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정서적 유대까지 포함하여 —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발전시대의 성장지상주의, 근대의 과학맹신주의가 더 이상 위세를 떨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맥락적·시대적 환경은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현재 처해 있는 위기적 심연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다.

투입, 산출 면에서의 실망, 그리고 투입을 산출로 변환시키는 정치시스템의 부패는 현존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새로운 정치제도를 희구하게 만든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다양한 위기에 대해 기존 정치 주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극복과 해결을 시도해 왔다. 우선 '대표성

의 위기’, ‘투입의 위기에 대해 기존 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해결이 시도되었다. 낮은 투표율과 관련하여서는 투표를 의무화 한다든지, 대국민 정치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단순다수득표제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도입·실시되었고 상당 정도 효과를 보기도 하였다. 또한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자금 규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행해져 왔다. 아울러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 등 다양한 직접민주주의(direct democracy) 기제가 도입, 실시되기도 하였다.

또 산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성과(performance)’ 중심적인 정부 개혁이 1980년대 이래 이루어져 왔다.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로 통칭되는 정부혁신, 행정개혁 프로그램은 정부가 어떻게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를 확실하게 하여 정부 정책의 반응성(responsiveness)과 고객지향성(customer-orientation)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부패’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책은 무수히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어느 나라든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 보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존 민주주의 제도 하 일반 국민, 일반 유권자가 느끼는 만족도, 행복도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대부분 민주주의 제도 하 국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제도가 뭔가 효과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내재적인 문제, 외부 환경적인 문제에 더하여 최후의 일격(final blow)은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보이는 새로운 강력한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던(구 사회주의권의 1당독재체제) 냉전 시대와 달리 탈냉전 시대 등장한 대안적 모델은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가진 취약점 — 특별히 정책 성과(policy performance)의 부족 — 을 정확히 파고들면서 새로운 매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비민주주의적 정치제도 대안은 중국이 대표하는 공적주의(meritocracy)이다. 냉전시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가졌던 문제점들을 개방과 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의 채택으로 돌파한 중국 체제는 정치제도로

서의 1당독재체제가 가진 경직성을 몇 가지 방식으로 보완해 왔고, 그러한 보완의 결과 만들어낸 중국식 ‘공적주의’를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Bell and Li, 2012; Li, 2012; 2013).

중국식 비민주주의 정치제도가 민주주의에 대해 제기하는 도전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정치제도는 투입보다 산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산출해 내는 정책이 얼마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안보, 경제 성장, 정치발전 등 국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해 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투입 과정에서 국민의 적절하고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둘째, ‘투입’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민주주의에서 중시하는 대표성(representativeness), 즉 인구의 각 부분이 얼마나 적절하고 충분하게 대표되고 있는가가 아니고 오히려 전체 인구 중 얼마나 유능하고 탁월한 인재들을 경쟁 또는 다른 방식을 통해 발굴하고 훈련시켜 고위 정책결정자의 지위에까지 올라가도록 하는가라는 점이다. 셋째, 유능하고 탁월한 인재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민주주의가 전가의 보도처럼 중시하고 있는 ‘투표’는 전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중국식의 당내 경쟁 성패, 지방정부 봉직 경력 등이 더 효과적인 표지(標識)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유능하고 탁월한 인재들을 발굴하여 정책을 위임하면 그것이 일관되게 양질의 정책의 산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고려에 기초하여 기존 서구식 대의민주주의보다는 중국식 공적주의 혹은 공적민주주의(meritocratic democracy)가 우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투입과 산출 면에서의 부진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세계화, 탈냉전, 탈발전·탈근대라는 시대적 상황과 비민주주의적 대안의 거센 도전 등에 의해 가속화,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여러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현재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IV. 정보통신기술과 정치위기의 심화

지식과 정보의 전달과 전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구텐베르크 인쇄술과 같은 기술혁명이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의 시대에도 유사하게 존재한다. 그것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정보통신기술의 가히 혁명적인 발전이다. 인터넷, 휴대폰, 태블릿 등으로 이어진 정보통신기술혁명은 구텐베르크의 기술혁명이 가져온 것과 유사한,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심대한 변화를 사회 곳곳에 초래하고 있다.

1980년대 중후반에 시작된 정보통신기술혁명의 본질과 그 여파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혁명과 과거 구텐베르크 시대의 인쇄술이 가지는 몇 가지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텐베르크 인쇄술이나 현 정보통신기술이나 지식과 정보의 전달과 전파의 방식에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점에서는 유사하다. 하지만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지식과 정보의 대량 배포(mass distribution)에 유용한 도구였다면, 현 정보통신기술은 지식과 정보의 개별화된 보급(individualized diffusion)에 유용한 도구이다. 자신이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검색(search)을 통하여 찾아내고, 이후 검색을 목적에 맞게 각색(customize)하여 자신의 필요와 기호에 가장 맞는 지식과 정보를 취사선택,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지식과 정보의 일방향적(one-way) 전달과 전파의 수단이었다면, 현 정보통신기술은 지식과 정보의 쌍방향적(two-way) 유통과 구성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네티즌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식과 정보를 교환, 축적, 수정하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정교화함으로써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구축·발전시켜 나간다.

정보통신기술혁명으로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사회에 초래된 변화는 실로 엄청나다. 무엇보다도 몇 십 년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엄청난 양의 정보가 인터넷 상에 유통되고 있다. 특히 세계의 운명을 주도하는 선진국들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의 비율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2012년 현재 세계 전체

적으로 인터넷 침투율(penetration rate)이 34.3%인데 비해 북미, 유럽, 대양주 등의 대륙들은 각각 78.6%, 67.6%, 63.2%로 훨씬 더 인터넷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Internet World Stats, <http://www.internetworldstats.com/stats.htm>).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터넷은 완전히 일상화되어 생활의 아주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도입과 발전 이후 벌어진 논쟁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정보통신기술이 인간들 상호 간의 소통을 저해할 것인가 아니면 촉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었다. 초기에는 인간이 컴퓨터와 가까이 지내고 온라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대면접촉이 줄어들고 따라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대인 소통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즉 인터넷 사용이 대인 소통과 상충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분명한 추세는 사용자들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대인 소통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이용이다. 사용자들은 미니홈피,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커뮤니티(카페, 클럽) 등 SNS를 활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과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 및 확대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65).

대중은 점점 인터넷과 모바일을 대인 소통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한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한국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13년 발표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현황> 보고서는 2012년 한국 미디어패널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SNS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3.5%가 SNS를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20대의 SNS 이용률이 6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신선, 2013).

정보통신기술은 우리를 보다 '소통적(communicative)' 인간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보다 '집합적(collective)'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룹의 형성이 더 손쉬워졌다. 새로운 그룹을 만들거나 기존 그룹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돈뿐 아니라 시간, 노력, 관심 등)이 감소하기 시작했다(Shirky, 2008: 27). 인터넷, 휴대폰 같은 최근의 소통 네트워크는 그룹 형성을 위한 유용한 플랫폼

폼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학자들이 지적해 왔듯이 공유, 협력, 집단행동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그 거래비용 때문에 제약을 받아왔던 것에 비해 이제는 그룹을 만드는 것이 셉 패킷의 표현에 따르면 “말도 안 될 정도로 쉬워졌다.” 새로운 그룹, 그리고 그룹의 새로운 유형에 관한 실험이 폭증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대중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Shirky, 2008: 63).

한편,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구축된 소통체계는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다양한 수익과 이윤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정보통신기술은 소통(communication)과 거래(transaction)의 결합가능성을 크게 증대시켰다. 소통과 거래가 결합한 대표적인 예는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인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이다. 소셜커머스는 소비자의 경험을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단순히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소셜네트워크와 직간접적으로 제휴를 맺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대 수익 명에 이르는 소셜네트워크의 회원들을 잠재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친구를 초대하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초대하는 과정을 통해 방문자가 급증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구매 결정에 있어 타인의 구매 경험 혹은 친구의 구매 경험의 공유가 대단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과거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광고나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도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타 네티즌들의 추천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는 제품의 홍보와 판매의 가능성을 높여준다(전세화, 2010).

이상을 고려해 볼 때 인터넷 등장 초기의 우려와 달리 인터넷과 모바일은 인간을 더 원자적(atomistic)인 것으로 만들지도 않았고 우리의 삶을 더 파편화(fragmentation)시키지도 않았다. 오히려 인간은 정보통신기술을 상호 간의 소통의 기제, 지식과 정보의 전파 기제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인간을 좀더 소통적으로 만들었고, 새로운 집단들을 형성하기 쉽게 만들었으며, 소통과 집단 형성을 통해 인간끼리 더 상호 신뢰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더 많이 소통하고 공유하며, 상업적 의도가 분명한 기업들의 광고나 ‘객관성’이라는 권위 뒤에 숨어 각자의 어젠다를 추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평판, 인지도, 전력 등 자율적 기제에 의해

그 신뢰도가 결정되는 우리 동료 인간들의 스토리와 서술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기술혁명은 정치의 영역에는 어떠한 변화를 초래해 왔고 또 초래할 것인가? 정보통신기술 일반이 인간의 삶과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논쟁과 유사하게 정보통신기술혁명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함에 있어서도 낙관론(예: Rheingold, 1995; Grossman, 1995; Toffler and Toffler, 1995; Barber, 1998; Grossman, 1995; Negroponte, 1995)과 비관론(예: Davis and Owen, 1998; Norris, 2001)이 공존하고 있다. 낙관론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민주적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 소외된 약자들에게는 대안적 권력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근본적인 정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변화가설(change hypothesis)이다(조화순, 2010: 38-39). 반면, 비관론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초기에는 일정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지만 중국에는 기존 사회의 권력구조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근본적인 정치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관찰을 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상화 가설(normalization hypothesis)이라고 볼 수 있다(조화순, 2010: 39-40). 이들 낙관론과 비관론은 대체로 정보통신기술이 시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따라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정보통신기술이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시민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의식·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시민의 역량 중 정보통신기술혁명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역량은 역시 정보 수집 역량이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여론과 선거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8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 참여를 장려하는 소셜미디어의 잠재력이 주목 받았으며, 그 후 그 영향력은 계속 증가해 왔다. 퓨 연구소(Pew Institute)에 따르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미국인들 중 20% 이상이 2010년 중간선거 기간 동안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정치 캠페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7% 정도가 정

당을 지지하거나 기존 정당에 가입하였다(The Economist 편집부, 2012: 88).

또한 시민들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정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시민과 기업이 온라인으로 정부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OECD 국가들에서 평균적으로 2010년 기준, 기업의 75%와 시민의 35%가 공공기관과 상호작용 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보고되었다(OECD, 2011).

아울러 시민은 정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청원(petition)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2011년 9월부터 ‘We the People’이라는 청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백악관 규정에 따르면 청원 사이트 ‘We the People’에 게시된 청원이 올라온 지 한 달 안에 10만 건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경우 관련 부처가 사안을 검토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백악관이 직접 관리하고 정책 결정권자에게 신문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으며 백악관에서 직접 자신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희망에 미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이곳에 청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기술혁명이 시민에 대해 미친 또 다른 중요한 영향은 그것이 시민을 정보의 ‘적극적 공급자’로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시민은 더 이상 정보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생산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간여하는 공세적인 주체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낳은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기존의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한 민회·윤성이(2009)에 따르면 정보 공급의 기능이 강한 단조로운 공간이었던 ‘웹 1.0’ 시대와는 달리 ‘웹 2.0’은 정보 공급뿐 아니라 개인의 정보 생산까지 가능하게 하고, 이는 시민이 정치과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의제적 정치구조와 잦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시민들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뉴스 정보를 생성하고 유포시킨다. 그들은 시위 현장이나 재난·재해사고 현장에서 생생한 정보와 사진들을 소셜미디어 상에 게재하고 전통 언론매체와는 다른 시각에서 뉴스 기사들을 전달한다.

국내의 대표적인 예로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싼 정부 및 정당과 시민 사이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이 거리의 촛불시위로 비화된 것

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시대의 변화와 시민의 변화를 읽지 못한 채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대응만을 취하였고, 이는 촛불시위의 증폭과 장기화를 초래했다. 시민은 제도권 정치에 대해 환멸을 표출했고, 시민의 불만은 인터넷 상에서 표현, 공유, 확산되었다. 결국 이는 오프라인 공간에까지 이어져 시위가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블로그와 여러 SNS 수단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기존의 언론을 통해서만 정보를 전달받는 소극적 수용자에서 벗어나 적극적 공급자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혁명은 시민의 정보 획득 및 생산·공급 역량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조직 능력(organizing capability)과 동원 능력(mobilizational capability)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조직과 동원이 이제 소수 운동가들이나 운동조직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정치·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는 정보의 획득이 곧 정치권력의 획득이라는 등식을 강조해 왔는데, 인터넷 보급이 정치조직이나 집단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빔버(Bimber, 2007)에 따르면 인터넷 혁명의 특성은 ‘정보의 풍부성’과 ‘정보 획득 비용의 인하’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은 집단을 조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폭 낮추고 조직 간의 경계를 허물어 유연하고 탄력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이끈다. 빔버(Bimber, 2007)는 2000년 5월 ‘백만 어머니들의 행진(Million Mom March)’이라는 단체의 회원 10만 여명이 워싱턴에서 총기 통제를 요구하며 벌인 대규모 시위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이 시위를 주도한 이는 도나 디스-토마시스(Donna Dees-Thomases)라는 여성이었는데, 그녀가 이 행진을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인터넷 도메인 등록이었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동원으로 말미암아 기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에 운집하여 총기 통제를 주장하였다. 그 후 미국 의회는 총기규제 조항을 담은 법안을 상정하였다. 비록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은 미국 민주주의 사상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은 시민의 역량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시민의 유형과 의식, 인식도 변화시킨다. 우선 시민의 유형이 ‘생각하는 시민’으로부터

‘참여하는 시민’으로 바뀌고 있다(윤성이, 2013). 산업사회 시민의 이상형이 합리적인 ‘생각하는 시민’이었다면 이제 네트워크 사회의 시민은 ‘참여하는 시민’으로 발전하고 있다. 네트워크 시민참여의 특성은 약한 연대(weak ties)의 참여시민 또는 네트워크 개인주의(network individualism)이다. 이들 네트워크 내에서는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제안하는 능동적인 시민 참여가 일상화 된다(송경재, 2008; 윤성이, 2009: 327; 2013).

정치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이전에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젊은이들이다. 또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정치적 활동보다 그 사람의 사회 경제적 수준, 소득과 교육에 훨씬 적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전은 소셜미디어가 앞으로 다가 오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크게 변화시킬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The Economist 편집부, 2012: 88). 다시 말해 이제 젊은 세대들은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의식을 획득하고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로더(Loader, 2007)는 디지털화된 세대의 정치 행태에서 소셜네트워킹의 적용을 해석하면서 젊은 세대가 단순히 ‘냉담해진 시민(disaffected citizen)’이 된 것이 아니라 디지털화된 방식의 정치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의 특징을 디지털세계에 연결되어 태어나고, ‘온라인 채팅방’이라는 가상공간에 살며, ‘블로그 공간’에서 양육되고, 디지털의 흐름에 의해 자양분을 받고 있다고 묘사하였다. 특히 웹 2.0인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의 사용에 주목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새로운 참여 패널의 확대와 정치적 공론장의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정보통신기술은 시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선거 등 정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정보통신기술은 선거운동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2008년과 2012년 대선은 SNS 활용 선거의 교본으로 꼽히고 있다. 오바마는 2008년 선거 때부터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출신의 크리스 휴스를 캠프에 영입하였다. 대선 전용 사이트 MyBO(MyBarakObama.com)를 만들고 이 사이트를 통해 지지자를 결속시키고 선거자금을 모았다.

MyBO를 통해 조직된 지지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오바마 대세론’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중앙일보, 2014/02/02).

이제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데 전통적인 조직력이나 자금을 동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SNS는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결속시키는 도구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에 대응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발언과 행동을 SNS와 실시간 보도하는 언론을 통해 접하고 서로 공유하며 이슈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보통신기술혁명은 정부로 하여금 반응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성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게 만드는 한편, 시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시민의 의식을 바꾸며, 선거 등 민주주의의 중요한 구성요소들도 변화시킨다. 시민들이 현재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실망감과 불신감을 고려해 볼 때, 이렇게 변화한 시민이 현재 투입, 산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런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혁명은 현재 다양한 위기에 처해 있는 선진민주주의국가의 정치가 질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제도 변화의 요구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에만 적용되고 비민주주의 정치제도는 그러한 위기로부터 자유로운가?

정보통신기술혁명은 권위주의체제에서도 중요한 정치변화를 불러일으킨다. 2010년 12월 이래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파업과 운동의 지속, 데모, 행진과 대집회와 같은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항의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조직, 의사소통, 인식 확대를 통해 광범위한 시민의 저항운동이 전개되었다.

SNS는 기존의 미디어가 통제되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미디어를 보완하고 때로는 대체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기존 미디어들이 비교적 정착된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정치적 견해를 나누고 모으고, 정치적 지지자들을 지지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였다. 튀니지의 자스민 혁명에서 시민들이 직접 정치적 행동을 하게 한 원인은 20년 이상 지

속된 독재정권에 대한 불만, 강압적인 검열, 경제적인 어려움, 2010년 당시 한 청년의 분신 자살사건, 지식층의 불만 등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불만이 인터넷, SNS등과 결합하면서 강력하게 확산되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김유향·조희정, 2012). 튀니지 국민의 약 20%를 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정부에 대한 항의 시위 등에 관한 정보를 페이스북에서 공유하였으며, 현지 보도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트위터 메시지는 현지의 활동가와 외국의 지지자들을 연결하는 매체가 되었다.

하지만 시민들만이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통제하려는 집단도 동일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독재자의 딜레마’로 명명된 현상이다. 즉, 정보통신기술로 더 스마트해진 시민이 권위주의와 독재자에게 도전을 제기하지만, 독재자 역시 SNS를 이용해 역(逆)정보를 흘리고 반대파 인사들을 인터넷 여론으로 차단하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 여론전을 전개하여 현 정치질서를 온존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사례는 정보통신기술혁명에 ‘스마트하게’ 대처하는 권위주의 정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스마트한 검열과 차이나넷을 통해 정보통신기술혁명의 예봉을 피해나가고 있다(유럽외교관계협의회, 2013: 150-157). 중국의 인터넷은 ‘글로벌 인터넷’과 ‘차이나넷’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차이나넷은 중국 정부가 언제나 서버를 통제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의 모든 웹사이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속도를 떨어뜨려 접속을 불편하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복제 사이트를 활성화시킨다. 예를 들어 구글 대신 바이두(百度), 트위터 대신 시나웨이보(新浪微博), 페이스북 대신 런런왕(人人网), 유튜브 대신 유쿠(优酷) 등 비슷한 기능을 가진 차이나넷 복제 사이트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차이나넷은 순조롭게 급성장하였다.

중요한 점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다양하고 스마트한 차단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이 시민과 정치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완벽하게 차단하거나 방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통제와 검열에도 불구하고 3억 명의 중국 블로거들이 차이나넷에서 특정 이슈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진행하거나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폭로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차이나넷은 과거 발언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일반 국민들이 웨이보라는 정치 참여 수단을 통

해 인터넷에서 발언 기회를 발견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최근 몇 가지 사고와 사건을 둘러싸고 시민과 중국 정부 간에 전개된 상호작용은 스마트한 검열을 구사하는 중국 정부조차 정보통신기술혁명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11년 7월, 저장성(浙江省)의 운저우시(温州市)에서 고속열차가 다른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 승객이 휴대전화로 웨이보에 사고를 현장 증계하였다. 40명의 승객이 사망하고 200명이 다친 대형 사건이었지만 관련 당국에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덮으려 했다. 하지만 승객과 지역 주민에 의해 현장이 생중계되는 바람에 네티즌들의 분노만 일으키고 말았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5일간 1,000만 명에 달하는 네티즌이 소셜미디어에 당국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였는데 이는 중국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으며, 이 사건의 여파로 2012년에 당시 철도부 장관이 몇 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어 10년형을 선고 받았다(유럽외교관계협의회, 2013).

중국 정부는 나름대로의 ‘스마트한’ 방식으로 정보통신기술혁명의 영향과 여파를 통제하고 차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원과 조직을 용이하게 하는 등 시민의 역량을 증대시켰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중국에서도 언젠가 각성된 시민들이 정치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정치제도를 요구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활판인쇄술의 보급과 전파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등장과 확산으로 이어진 구미 등 지역과 달리 중동, 중국 등에서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다. 그 주요한 이유는 당시 기술혁신이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면 지원할 만한 사회경제적, 제도적, 문화적 자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기술혁신의 속도와 파급력 또한 현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보다 완만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들이 지금 현재도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목하 정보통신기술혁명은 과거 구텐베르크의 금속활판인쇄술보다 그 정치체제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더 급속하고 강력할 수 있다. 요컨대 민주주의, 권위주의를 불문하고 정보통신기술은 모든 정치제도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더 나은 민주주의의 구상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로 각성된 대중은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제도를 요구했다. 그와 유사하게 정보통신기술의 등장과 발달로 각성된 오늘날 시민은 현존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지적하며 새로운 정치제도를 희구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혁명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역량과 성격을 변화시켰다. 시민은 더 이상 큰 범주(‘노동자’, ‘보수파’)로 단순 일반화되지 않는다. 시민은 다층적, 다면적, 다차원적 정체성을 가진다. 그리고 시민의 그러한 다(多)정체성은 정보통신기술혁명에 의해 더욱 촉진된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온라인상의 토론과 설득, 의논과 합의를 통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때로는 비일관적인) 입장들을 취사선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극심한 다정체성을 가지는 시민을 현존 민주주의는 적절히 ‘대의’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기존 정치제도에 대한 심각한 불만으로 연결되고 있다.

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문성’을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인터넷의 발달로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를 수많은 네티즌들이 확보, 공유, 활용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전문가의 독점적(exclusive) 전문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정보, 너무나 복잡한 문제들(wicked problems), 너무나 급속한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분은 모호해졌다. 누구라도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누구라도 비전문가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정보통신기술혁명은 시민에게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했다.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에는 시간과 공간이 부족했던 이전과 달리 정보통신기술혁명 이후, 시민에게는 ‘정보’라는 도구뿐 아니라 무한한 공간과 늘어난 시간이 주어졌다. 시민들은 이제 정해진 시간과 장소

에서 동시 참여 가능한 행위자들만 교류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지 않은 온라인 공간에서 시간과 상관없이 무수히 많은 행위자들과 교류하고 연대하며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 변화된 시민은 그들의 다정체성, 전문성,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으로 인해 현재의 대의제가 자신들을 '대의'할 수 없다고 인지했고 '대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현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의제를 비판한 왕샤오강(王紹光, 2010)의 주장처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 '선주(選主)'로서의 현 민주주의는 '민주(民主)'의 개념을 결여하고 있다.

인터넷 활동은 때로 진영 논리를 강화한다. 아군이 아니면 적군이라는 진영 논리는 인터넷 상의 진영 SNS 그룹 활동을 더욱 강화되고 공고화된다. 모든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책의 수행, 법의 집행, 공익의 추구 등은 허위 또는 가식으로 치부된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 부와 빈 등으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사회에서 더 이상 객관적, 중립적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빔버(Bimber, 2007)는 인터넷이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이끌기보다 이미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 참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였다. 시민은 보통 자신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과 유사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그들과 연대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변화가 현존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뿐 아니라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정치제도에 대해서도 중요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투입과 산출 면에서 위기를 맞은 민주주의 국가들, 그리고 아직까지는 스마트하게 사회를 통제하고 있지만 언제 분출할지 모르는 시민의 각성을 머지않아 맞이해야 하는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국가들 공히 정보통신기술혁명이라는 도전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혁명이 가져온 사회변화에 적절히 조응하고,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을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제도를 고민하고 고안해야 한다.

그러한 정치제도가 어떠한 모습을 띠어야 하는가는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정치제도가 투입 면에서 현존 민주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참여와 협의를 강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의식과 인식이 높아진 시민은 직접민주주의(direct democracy)적인 요소들과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적인 요소들의 강화 또한 요구할 것이다. 동시에 새로운 정치제도는 일관되게 양질의 정책 대응을 산출해낼 것을 요구 받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책 대응이 효과적인지 그렇지 못한지, 즉 문제를 해결했는지 해결하지 못했는지 너무나도 즉각적으로, 그리고 명백하게 보여준다. 이제 시민은 정부의 무능과 무지를 금세 파악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과 장치를 확보했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제도는 유능하고 효과적인 정책 반응을 산출해 내는 메커니즘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관되게 양질의 정책 대응을 산출할 수 없다면 최소한 저질의 정책 대응을 산출해 내는 무능한 정책 담당자들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유능한 대안적 인물들로 교체할 수 있는 장치와 제도라도 갖추어야 한다. 그마저도 못한다면 왜 제대로 된 정책을 산출해 내지 못하는지 국민에게 허심탄회하게 설명과 설득이라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소통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점점 더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점점 더 인내력이 부족해지는 오늘날의 '각성된 시민'을 무마·만족시키기 힘들 것이다.

투고일자: 2016-09-09 심사일자: 2016-09-21 게재확정: 2016-09-28

참고문헌

- 고나무. 2012. 「대선을 보는 창구, 자금」. 『한겨레21』 제935호.
 김유향·조희정. 2012. 「튀니지의 자스민 혁명과 SNS의 역할」. 『이슈와 논점』 192호.
 민희·윤성이. 2009.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대의제의 적실성 탐색」. 『21세기정치학회보』 19권 2호. pp. 147-171.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백종민·조목인. 2012. 「美 금융·재계, 오바마 재선에 '멘붕」. 『아시아경제』, 11월 8일, 9.
 송경재. 2008. 「네트워크 시민운동의 동학」. 한국정치학회 건국6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 신선. 2013.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현황」. 『KISDI STAT Report』, 13권 4호. pp. 11-15.
- 王紹光 저, 김갑수 역. 2010. 『민주사강: 중국, 성장의 길목에서 민주주의를 묻다』. 서울: 에버리치홀딩스.
- 유럽외교관계협의회. 2013. 『CHINA 3.0』. 서울: 청림출판.
- 윤성이. 2009. 「2008년 촛불과 정치참여 특성의 변화: 행위자, 구조, 제도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7권 1호. pp. 315-334.
- _____. 2013. 「정보사회의 민주주의와 e-거버넌스」. 미래전략포럼 자료집. <http://www.kifs.org/contents/sub3/forum.php?method=info&searchKey=&searchWord=&fset=&slId=2615#content> (검색일: 2016. 9. 6).
- 이창구. 2014. 「뇌물료 병든 유럽... EU 한해 예산 맞먹는 손실」. 『서울신문』, 2월 5일.
- 전세화. 2010. 「소셜네트워크, 쇼핑 패러다임 바꾼다」. 『데일리한국』, 7월 22일.
- 조화순. 2010. 『디지털 거버넌스 국가·시장·사회의 미래』. 서울: 책세상.
- 중앙일보. 2014. 「1분당 250만 건 글·사진 ... 매일 7억 명 폐복서 소통 중」, 2월 2일.
- Barber, Benjamin. 1998. "Three Scenarios for the Future of Technology and Strong Democracy."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3(4): 573-589.
- Bell, Daniel and Eric X. Li. 2012. "In Defence of How China Picks Its Leaders." *The Financial Times*, November 11.
- Bimber, Bruce 저, 이원태 역. 2007. 『인터넷 시대 정치권력의 변동: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진화』. 서울: 삼인.
- Collier, David and Steven Levitsky. 1997. "Democracy with Adjectives: Conceptual Innovation in Comparative Research." *World Politics*, 49(3): 430-451.
- Davis, Richard and Dianna Owen. 1998. *New Media and American Politics*. New York: Oxford Press.
- Grossman, Lawrence K. 1995. *The Electronic Republic*. New York: Penguin Books.
- Huntington, Samuel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Li, Eric X. 2012. "Why China's Political Model Is Superior." *The New York Times*, February 16.
- _____. 2013. "The Life of the Party: The Post-Democratic Future Begins in China." *Foreign Affairs*, 92(1): 34-46.
- Linder, Robert D. 2008. *The Reformation Era*. Westport, Conn: Greenwood Publishing Group.
- Loader, Brian D. 2007. *Young Citizens in the Digital Age: Political Engagement, Young People and New Media*. New York: Routledge.
- Negroponte, Nicholas. 1995. *Being Digital*. New York: Alfred A. Knopf.
- Norris, Pippa. 2001. *A Virtuous Circle: Political Communication in Post-Industrial Societ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CD. 2011. *Government at a Glance 2011*. OECD.
- Rheingold, Howard. 1995. *The Virtual Community: Finding Connection in a*

- Computerized World*. London: Minerva.
- Shirky, Clay 저. 송연석 역. 2008. 『끌리고 쏘리고 들끓다』. 서울: 갈리온.
- The Economist 편집부 저. 김소연·김인향 역. 2012. 『메가체인지 2050: 이코노미스트 미래 보고서』. 서울: 한스미디어.
- Toffler, Alvin and Heidi Toffler. 1995. *Creating a New Civilization: The Politics of the Third Wave*. Atlanta: Turner Publish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evolution and the Future of Democracy

Kim, Sunhyuk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This paper is an explorative study on the impac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Revolution, epitomized by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on the existing political systems. Of various factors effecting change in political systems, this paper focuse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that, through a series of mediating factors, causes change in political systems. The paper first discusses how the invention and diffusion of the Gutenberg printing press influenced the rise and spread of the democratic form of government. Next, it observes that the extant representative democracy is faced with multiple crises, such as the deficiency in popular representation, lack of policy efficacy, and widespread corruption. The crisis of democracy is aggravated by various contextual factors including globalization and the strong challenge mounted by non-democratic regimes such as the Chinese one. The paper then probes the diverse changes the ICT Revolution has been causing in our daily lives, in citizen's political capacity and consciousness, and in important elements of democracy like electoral and representative institutions. The paper concludes with a plea for further research on utilizing ICT for creating a better democracy that features, *inter alia*, citizen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Keywords: Democrac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echnological innovation, political change, Gutenberg printing press